

건설기술 진흥법

<목 차>

1.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공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김태형
	담당부서 (과)	건설안전과		직급	전산사무관
	국장	김태병		연락처	044-201-4172
	과장	박동주		이메일	thkim0528@korea.kr

2025. 1. 2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기술안전정책관

성명 김태병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공개											
	2.규제조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의2 신설											
	3.위임법령	-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27.~2025.3.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필요 * '19.5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적근거 부재로 '23년 4분기부터 공개 보류 중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건설사업자</td> <td>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공공 건설공사 발주청</td> <td>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이해관계자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이해관계자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9.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설공사 중 사망사고 예방을 통한 근로자 및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근로자 및 국민의 사망사고 발생 예방 등 편익 발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매년 건설사고로 인해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건설사고 경감을 위해 전체 사망사고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 사망자수 : 251명('20) → 271명('21) → 238명('22) → 244명('23) → 204명('24)
100대기업 사망자수 : 44명('20) → 67명('21) → 54명('22) → 60명('23) → 52명('24)

- 국토부는 매년 23,000여 곳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등 건설 사망사고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건설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 등은 사망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해당현장에서만 불운하게 발생한 것으로 안일하게 인식하고, 안전보다 경제성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현실
- 이에,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사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19.5~)해 왔으나,
- 법적근거 미비 지적에 따라 '23년 4분기부터 공개를 중단한 상황으로,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사의 책임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단공개 재개 필요

* 슬그머니 사라진 국토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발표(연합뉴스, '24.3.31)

** '사망사고 건설사 발표'가 망신주기라고? 국토부, 슬그머니 폐지(한겨레, '24.4.1)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 내용) ①건설사 자율적 안전확보 노력, ②법적근거 없이 건설사 협조를 통한 명단공개, ③법적근거 마련 후 명단공개

- (선택 근거) 건설사의 자율적 노력에 맡기기에는 건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명단공개와 같은 침익적 행위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설사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근로자 등 국민			

3. 규제목표

-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의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개함으로써, 대형 건설사가 경각심을 갖고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안전확보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적절한, 필요 최소한의 방안으로, 이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불명예 등 부담에 비해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 등 공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사항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사항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사항 없음
판단 근거	해당사항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사항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사항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 불가
유연한 분류 체계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 불가
네거티브 리스트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부적절
사후 평가관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 적용 부적절
규제 샌드박스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부적절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 안전보건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 원인, 업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 수립 중
-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보건안전행정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는 공개 보고서로 발간되어 안전 개선에 활용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 발표 하며, 사고 유형별, 업종별 통계를 제공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
- (공개 정보의 종류)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 사고유형, ③ 사상자 수, ④ 사고원인, ⑤ 관련 업체정보, ⑥ 안전조치 미흡 여부, ⑦ 행정 처분내용 등

○ 타법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로 연간 2명 이상 사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일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
-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을 관보, 인터넷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실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공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대상의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편익분석 불필요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규제대안 :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공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사망사고 발생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사망사고 발생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사망사고 발생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4제2항제8호 등에 따라, 이미 건설사고 사실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규제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분기별로 사망사고 발생 시평 상위 100대 건설사를 공개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추출이 가능한 정보이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사고정보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구축·운영을 통해 관리 중으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사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19.5~)
 - 법적근거 미비 지적에 따라 '23년 4분기부터 공개를 중단
- 건설사 명단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24.4~5)을 거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지속 검토·보완

3. 종합결론

-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경제성 보다 안전 우선으로 건설사의 인식을 전환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연간 전체 사망자의 25%를 차지하는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명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적절한 규제 도입이 타당